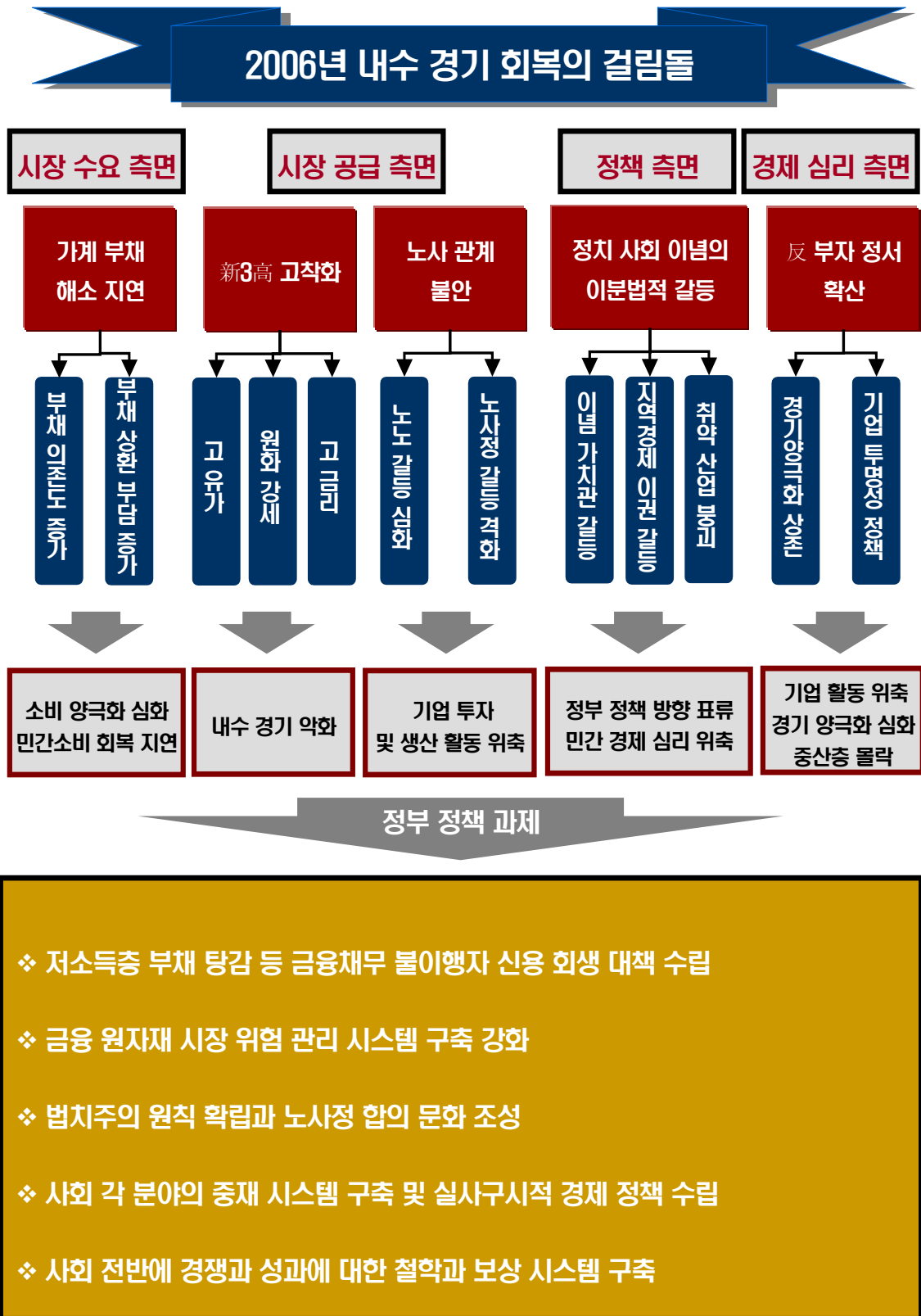


□ 2006년 내수 경기 회복의 걸림돌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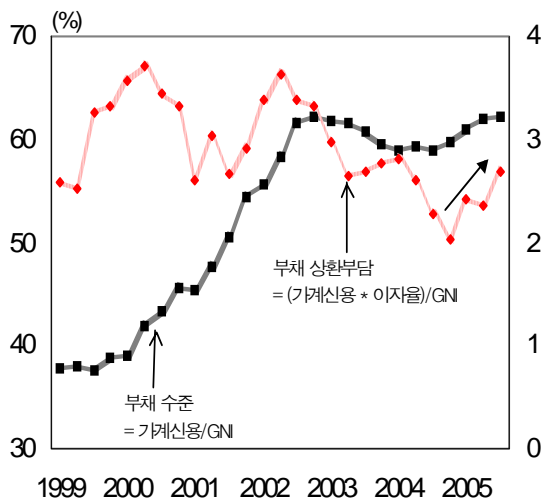
- 2006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사회 현상중 시장의 수급, 정책(제도), 심리 측면에서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될 5대 요인을 추출함
- (시장 수요) 가계 부채 누적에 의한 민간소비 회복 저해
 - 실질 소득 정체, 고용 부진 지속,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채 의존도와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부채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 공급) 新3高 고착화에 따르는 내수 경기 회복세 약화
 - 시장 수급 불균형에 의한 고유가, 美 경제 불확실성에 따르는 원화 강세, 금리 인상 추세와 내수 회복 등에 의한 시중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임
- (시장 공급) 1기업-多노조 시대 도래에 의한 勞-勞 갈등 심화
 - 대기업-중소기업 노조간, 기업-산별 노조간, 같은 사업장 내의 복수 노조간, 정규직-비정규직간 노노 갈등과 같은 노조 내부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관계법 개정에 대한 노사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선거전 본격 돌입 등에 의한 정치·사회·이념의 이분법적 갈등 구조 심화
 - 지방 선거, 대선, 총선 등 연이은 선거를 앞두고 배타적이고 소모적 이념 논쟁·가치관 대립 극명화, 행정도시 이전 등에 따르는 지역 갈등 심화, 시장 개방에 의한 취약 산업의 붕괴 등이 전망됨
- (경제 심리) 反부자 정서 확산에 의한 기업 경제 심리 위축
 - 경기 양극화 진전, 기업 투명성 정책 등으로 反대기업, 反부자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증대함

2. 5대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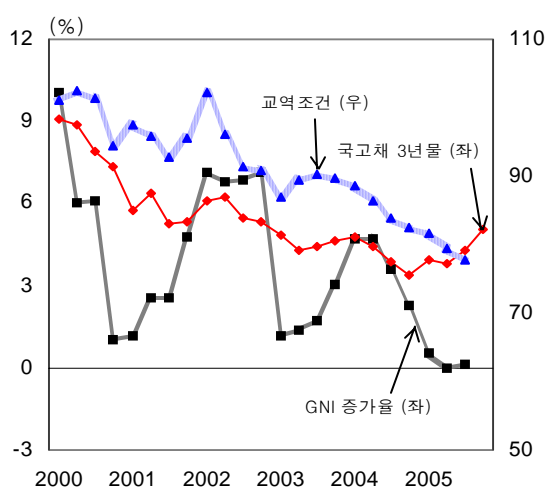
(1) 가계 부채 누적에 의한 민간소비 회복 저해

- 실질 소득 정체, 고용 부진 지속,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채 의존도와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부채 해소가 지연됨에 따라, 소비 양극화 심화, 민간 소비 회복 지연 등이 예상됨
- (가계 부채 구조조정 지연) 최근에 들어 가계신용 증가세가 국민소득 증가세보다 속도가 빨라져 가계의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부채 상환 부담도 높아짐
 - 부채 부담 증가 : 부채 수준(가계신용/GNI)은 2004년말 59.7%에서 2005년 3/4분기에 62.2%로 증가하였으며, 부채 상환 부담(가계신용×이자율/GNI)도 2.04%에서 2.69%로 늘어남
 - 또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2004년말 2.06배에서 2005년 3/4분기에 2.01배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부채 부담 증가의 원인 : 경제 전체로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구매력(GNI)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 악화 등으로 가계 지출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마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가계 부채 부담 추이 >



< 실질 GNI 증가율 및 이자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전망) 2006년에도 교역 조건 개선 미흡, 고용 부진 지속,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의존도와 부채 부담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가계 부채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고유가에 따르는 교역 조건 개선 미흡, 미약한 내수 회복에 의한 고용 부진 지속 등으로 가계 부채 의존도는 증가할 전망이다
 - 교역 조건은 IT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고유가 지속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적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업 투자 부진으로 소득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 상황 개선이 불투명하고, 소비 성향 높은 청년층의 고실업 현상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가계 지출이 소득보다 부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완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2006년에는 미국에 이어 유로와 일본의 정책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내외 금리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시중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담보 가치의 하락 등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영향) 가계 부채 해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 양극화 심화, 민간 소비 회복 지연 등이 예상
- (정책 과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희생 지원 대책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가계 부채 해소 대책 마련
 - 금융채무 불이행자 희생 지원 대책 강화 : 현재의 개인 신용 회복 대책의 요건 완화,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채 탕감 등 보다 전면적인 개인 신용 희생 대책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소비 활성화 : 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가 생필품의 경우 안전성 강화,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한시적 소비세 폐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新3高 (高유가·원高·高금리) 고착화에 따르는 내수 경기 회복세 약화

- 시장 수급 불균형에 의한 고유가, 美 경제 불확실성에 따르는 원화 강세, 세계적 금리 인상 추세 등에 의한 시중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수출 부진,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新3高) 최근 국내 경제는 석유 시장의 수급 불안에 따르는 고유가 지속, 국내 수출 호조 등에 의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 세계적 금리 인상 추세 및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의한 시중 금리 상승의 新3高 현상이 나타남)
 - 高유가 : 중국, 미국의 경제 성장 호조세에 따른 원유 수요 대폭 증가, 중동 지역 테러 위협 증대 등의 불안 요인으로 12월 30일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말 대비 60.7% 상승함
 -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져 1월 4일 현재 배럴당 55.88달러를 기록함
 - 원화의 상대적 強勢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호조세 지속,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지속,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 등으로 엔화, 유로화에 비해 달러화에 상대적 강세를 나타냄
 - 12월 30일 현재 엔화와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각각 전년말대비 14.2% 및 13.2% 절하된 반면, 같은 기간 원화는 오히려 2.3% 절상됨
 - 올해 1월 4일에는 998.5원을 기록하며 1,000원선을 하향 돌파함
 - 금리 上昇 : 美 정책 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内外 금리차 확대,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전년말 대비 1.76%p 상승함
 - 美 연방기금 금리 : 2004년 6월 이후 13차례, 3.25%p 인상
 -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 (3년물) 는 1월 4일 현재 5.06%를 기록함

< 유가, 환율, 금리 추이 >

	2004	2005 1/4	2005 2/4	2005 3/4	2005.11	2005.12	전년대비
국제 유가 (\$/배럴)	33.11	45.91	52.09	56.32	50.18	53.19	60.7%
원/달러 환율 (원)	1,035.1	1,015.5	1,025.4	1,041.1	1,033.5	1,011.6	2.3%
엔/달러 (엔)	103.13	107.53	110.47	113.33	119.75	117.8	-14.2%
달러/유로 (달러)	1.36	1.29	1.21	1.20	1.18	1.18	-13.2%
금리 (국고채 3년, %)	3.28	3.91	4.02	4.60	5.10	5.08	1.8%p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주 : 1) 기말 기준임

2) 국제 유가는 두바이 油(현물, 배럴당) 기준이며, 금리는 국고채 3년 수익률임

3) 환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부호는 각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낸 경우 양(+), 약세인 경우 음(-)으로 표현함.

1) 新3高는 외환위기 이전 高임금, 高지가, 高금리의 3高와 대비되는 개념임

- (전망) 2006년에도 국제 유가는 구조적 수급 불안 상존으로 고유가 지속,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반전 및 위안화 평가 절상 등에 따르는 원화의 강세,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의한 시중 금리 상승세가 전망됨
 - 고유가 지속 : 최근의 유가 급등은 중국, 미국 등의 원유 수요 급증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워 고유가 수준이 지속 예상
 - 원화 강세 : 수출 호조와 같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던 원화는 2006년에 들어 美 쌍둥이 적자 문제의 채부상 등에 따르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반전, 위안화 평가 절상과 같은 대외적 요인에 의해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금리 상승세 지속 :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미국에 이어 일본, EU 등이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국내 정책 금리도 1~2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시중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영향) 新3高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 부진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이 경우에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침체가 예상
- (정책 과제) 금융·원자재 시장 변동성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실질적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인상 자제, 적극적인 자원 수입 다변화 정책 추진 등이 요구

< 유가, 환율, 금리 전망 >

		2004	2005	2006 (E)
국제 유가 (\$/배럴)		37.8	54.2	61.8
환율	엔/달러 (엔)	102.6	117.8	108.9
	달러/유로 (달러)	1.355	1.1849	1.272
금리	미국 (%)	1.4	3.2	4.2
	EU (%)	2.1	2.2	2.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주 : 1) 국제 유가는 브렌트, 두바이, WTI의 배럴당 현물 가격(달러, 연평균) 평균이며, 2005년 및 2006년은 IMF 전망치임

2) 엔/달러, 달러/유로는 해외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임(기말 기준)

3) 금리(연평균)의 경우 미국은 3개월 재무성 증권, EU는 EURIBOR(3개월)이며, 2006년은 IMF 전망치임.

(3) 1기업-多노조 시대 도래에 의한 勞-勞 갈등 심화2)

○ 중소기업 노사 분류 급증, 노노 갈등 심화, 노동 관계법 개정에 대한 노사 대립 격화 등으로 노사 협상 비용의 증대와 잦은 노사 분류가 예상됨

○ (대-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사 분류의 양극화) 경기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의 노사 분류 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노사 분류도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2005년 11월 말 현재 전체 노사분규는 268건으로 2004년 대비 59.6% 수준에 불과하여 외형상 노사 관계가 안정된 듯이 보임

- 그러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사분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8.8%에서 2004년에는 40.5%로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노사분규 비중은 22.0%에서 12.1%로 크게 낮아짐

- 특히 2006년에는 미약한 경기 회복, 경기 양극화의 지속 등의 경제 상황적 요인, 대기업의 연봉제 확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노사 분규가 급증할 우려가 높음

○ (노노 갈등 심화 우려)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 초기업 노조간, 복수 노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노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 노조 입지 약화 : 기아자동차 노조 비리, 국민의 지지가 결여된 일부 귀족 노조의 파업, 노동계 내부의 계파 갈등,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노조 조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0.6%에 불과한 상황임

- 기업 - 초기업 노조간 갈등 우려 : 양대 노총의 주도권 경쟁, 산별 노조의 세력 강화, 복수 노조의 허용 등으로 노조 내부의 불안정성이 심화됨

2) 한국노동연구원,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 2005년 1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2006년 경영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조사'; 노동부 등 참조.

- 2004년 12월 현재 391개의 지역·업종 노조(조합원 365,231명)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국 규모의 8대 산별노조(조합원 239,840명)도 동시에 존재하여 교섭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정규직 - 비정규직 갈등 우려 : 미약한 경기 회복에 의한 고용 시장 개선 미흡으로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 기업, 정규직 노조 등이 이해관계에 얽매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에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갈등,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따르는 소비 위축 등의 우려가 있음
- (노사정간 갈등 심화)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노사정간 이견으로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노조상근직 임금 지급 여부, 대체근로 허용 요건, 복수노조의 교섭권 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노사정간 이견 차이가 심하여 노사정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전망이다

< 주요 노동관계법 이슈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 >

	정부측 입장	노조측 입장	경영계측 입장
노조상근직 임금 지급	금지	노사간 합의	금지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공익만 허용	모두 금지	모두 허용
복수노조 교섭권	과반수 노조 또는 교섭단	노사간 합의	과반수 노조

자료 : 각 언론 보도 참조.

- (영향) 노사 협상의 창구 다원화, 잦은 노사 분규 등으로 기업 투자와 생산 차질,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경기 회복 기조의 약화가 우려됨
 -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정규-비정규직 근로자간 사회 갈등 확산, 노사 교섭의 중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이견 차이에 의한 노사 대립 격화 등으로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함
- (정책 과제)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원칙 확립, 노사정 합의 문화 조성, 임금피크제·임금총액제 도입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됨

(4) 선거전 본격 돌입 등에 의한 정치·사회·이념의 이분법적 갈등 구조 심화

- 지방 선거, 대선, 총선 등 연이은 선거를 앞두고 배타적이고 소모적 이념 논쟁·가치관 대립 극명화, 경제 이권 문제와 관련된 지역 갈등 심화, 시장 개방에 의한 취약 산업의 붕괴 등이 예상됨
- (이념 논쟁과 가치관 대립 지속)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념과 가치관의 이분법적 구도가 지속됨
 - 아직 미해결 상태인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과 위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되면서 보수 - 진보간 이념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황우석 교수 사건, 사학법 개정 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회 이슈들이 이념 논쟁화 되는 양상이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특히 환경과 개발, 분배와 성장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정치·지역 갈등 심화) 지방자치단체 선거 (5·31), 공공기관, 행정도시 지방 이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정치 및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자치단체 선거 (5·31) : 지난 총선 이후의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여당이 열세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국민중심당의 서부연합'과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 경우에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존재
 - 권력구조 개헌 논의 재개 :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본격 재개될 전망
 - 이전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겠지만, 민주당 - 국민

- 중심당이 지방선거에서 세력을 형성할 경우 이들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 논의도 가세될 것으로 예상
- 특히 2007년 대선을 향한 각당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 지역 갈등 우려 : 지역 개발, 행정수도 이전, 행정 기관·공기업 이전, 혁신 도시 선정 등과 같은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 최근 건교부의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등이 강북 개발 차질, 교통 문제, 지역 산림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
 - 행정 수도 이전, 행정 기관·공기업의 이전, 혁신 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의 명확성,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간 또는 중앙-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
 - (산업간 갈등) 한-캐나다 FTA 등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수준의 무역 자유화 협정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경공업 등 취약 산업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 무역 자유화의 결과 피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공업, 농업 등에 대해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가 부재함
 - 이에 따라 최근의 여의도 농민 시위와 같이 피해 산업 종사자들과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영향) 갈등 해소가 미흡하여 정치·사회 불안이 확산될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의 표류,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존재함
 - (정책 과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중재 시스템 구축, 현실에 바탕을 둔 實事求是적 경제 정책의 수립, 무계획적인 지역 난개발 지양 등이 필요함

(5) 反부자 정서 확산에 의한 기업 경제 심리 위축

- 경기 양극화 진전, 기업 투명성 정책 등으로 반대기업, 反부자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이에 따르는 기업들의 경제 심리 위축, 투자 회복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확대됨
- (反기업 정서 해소 부진) 종합적인 기업호감지수 (CFL, Corporate Favorite Index)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부문별로 ‘전반적 호감도’, ‘윤리 경영’ 부문에서 지수 상승이 정체됨³⁾
 - 전반적인 호감도 하락 : 2005년 5월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47.7점이었으나 동년 11월에는 47.6점으로 하락함
 - 윤리 경영 지수 정체 :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점수도 동기간 19.6점에서 변화가 없어 기업호감지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호감 지수 개선세 미흡의 원인 : 최근 벌어진 정경 유착 의혹, 분식 회계, 경영권 분쟁 등 잇단 기업 경영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對 기업 이미지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 2005년 11월 同조사에서 기업에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로 1위가 ‘분식 회계 등 비윤리 경영’, 2위가 ‘경영권 세습 등 족벌 경영’ 등으로 나타남

< CFL 변화 추이 >

구 분	2003년 12월	2004년 6월	2004년 12월	2005년 5월	2005년 11월
종합지수	38.2	39.1	44.4	47.0	48.5
전반적인 호감도	38.8	40.1	46.0	47.7	47.6
윤리경영	9.6	14.1	18.8	19.6	19.6
국제경쟁력	59.0	58.0	62.9	70.5	71.7
국가경제기여	38.6	37.2	40.6	42.3	45.1
생산성 및 기술향상	52.1	50.4	57.9	63.2	70.2
사회공헌활동	28.8	30.8	33.4	35.8	40.1

자료 : 기업호감도 조사 각호.

3)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기업호감도 조사 참조.

○ (전망) 경기 양극화의 진전, 정치·사회 불안, 기업 투명성 확대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약한 내수 회복세에 따르는 경기 양극화 :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분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장 지체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경제 내 양극화 현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간 고소득층-저소득층간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져, 反 대기업, 反 부자 정서가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 정치·사회 불안 : 동시지방선거, 대선 경쟁 등 정치 불안이 예상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인기영합적 정책이 남발될 우려가 존재함
- 정부의 기업 투명성 정책 추진 : 특히 2006년은 공정위의 시장개혁 3년 로드맵의 마지막 해에 해당되어, 가장 부진한 부문인 기업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 축소를 위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문제 등이 부각될 전망

- 집중투표제 :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을 요청할 경우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
- 서면투표제 :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투표가 가능한 제도

○ (영향) 기업들의 경제 심리 위축, 국내 투자 유인 감소 등으로 투자 부진과 같은 기업 활동 위축 현상을 초래할 경우, 경기 양극화 심화, 중산층 몰락, 성장잠재력 약화 등이 예상됨

○ (정책 과제) 사회 전반에 경쟁과 성과에 대한 보상 철학과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 노력, 경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2006년에 예상되는 5대 경제 불안 요인을 해소하지 못 할 경우, 소비 침체, 수출 부진, 기업 투자 부진, 사회 불안 확대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것임
- 정책 과제
 -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 불량자) 회생 지원 대책 강화 : 현재의 개인 신용 회복 대책의 요건 완화,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탕감 등 보다 전면적인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노력이 절실함
 - 저소득층의 소비 활성화 : 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필품에 대한 한시적 소비세 폐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업 비용 부담 완화 : 금융·원자재 시장 변동성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실질적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인상 자제, 적극적인 자원 수입 다변화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함
 -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 :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원칙 확립, 노사정 합의 문화 조성, 임금피크제·임금총액제 도입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사회 갈등 해소 주력 : 사회 각 분야에서의 중재 시스템 구축, 현실에 바탕을 둔 實事求是적 경제 정책의 수립, 무계획적인 지역 난개발 지양 등이 필요함
 - 대기업 정서 해소 : 사회 전반에 경쟁과 성과에 대한 보상 철학과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정, 경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